

Ⅲ. 남북관계 발목잡는 ‘연계론’의 덫점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의 덫이 되어왔던 ‘연계론’의 망령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발목 잡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연계론은 시시때때로 등장해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정치문제와 교류협력 문제의 연계이다. 즉, 핵과 미사일 같은 정치·군사 문제에 경제협력과 민간교류 문제 등을 연계시켜 남북관계 발전의 전반적인 기회의 창을 닫아버린 사례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가 그런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과 서로 다른 사안들에 대한 병행접근을 피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북한 핵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교류와 협력에 연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평화정착의 대북접근을 병행하여 2007년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시작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성과까지 낳았다. 물론 MB정부는 이를 모두 뒤집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다.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얻은 것은 없는 10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온갖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 문제를 연계시키고 나아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연계하여 남북관계를 악용한 그 이전 정권 50년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잃어버린 50년’이다. 이제는 ‘잃어버린 50년, 다시 찾은 10년’의 프레임으로 당당하게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비록 그 상대인 북한이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제안에 금강산 관광 연계제안을 내놓고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판문점이 아닌 금강산에서 하자고 ‘간 보는’ 제안을 하곤 해도 우리는 연계론의 덫에 걸리지 말고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모든 현안을 병행접근하자는 과감한 수용과 역제안으로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분리대응’이라는 용어도 ‘병행접근’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분리’라는 말 속에 상대의 의사는 상관없이 우리식대로 대응하겠다는 부정적 인식이 덧입혀질 수 있으니 ‘병행’이라는 단어사용으로 상대의 바람도 검토하며 접근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원산 관광지 개발 및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으로 강원도 일대의 국제 관광벨트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제 1순위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남한을 배려해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며 괜히 ‘간 보는’ 생트집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